광주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다양한 의견 듣는다

오늘부터 환경·복지·경제·체육 등 직능별 공청회
시·자치구·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별교육도 전개

광주시가 전남과의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공무원을 비롯해 환경·경제·복지·교육 등 직능별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주시는 23일 기후에너지진흥원에서 환경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까지 시민의 삶과 밀접한 9개 분야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추진, 학계·현장 전문가·관련 단체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분야별로는 △23일 환경 분야 △26일 경제·산업과 시민사회단체 △27일 사회복지·노인·장애인·보건의료와 여성·아동·외국인 △28일 교육·청년 △29일 문화·관광 △30일 건설·안전·교통·노동 △2월2일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2월4일 체육 분야 순이다.

분야별 시민공청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 제안 등을 청취한다.

광주시는 전문적 식견을 가진 직능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공청회·간담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특별교육은 광주 인재교육원이 이날 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시와 5개 자치구,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직자들의 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통합 정책을 직접 담당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의 미래와 행정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영문 광주전남통합추진단장은 "시민들은 광주전남 통합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통합의 의미와 그로 인한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채널을 가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교육청, 시의회, 자치구, 자치구의회와 권역별 합동공청회를 열고 있다. 합동공청회는 지난 19일 동구를 시작으로 △22일 서구(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23일 광산구(광산구청 윤상원홀) △27일 북구(북구문화센터) △28일 남구(빛고을 시민문화관) 등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개최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벼 깨씨무늬병 재확산 경계
전남농기원, 토양검정 등 당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농업재해로 인정될 만큼 확산됐던 벼 깨씨무늬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재배기술 실천을 농가에 당부했다.

22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에서 발생이 급증하는 깨씨무늬병이 지난해 평년을 웃도는 고온과 불안정한 기상 여건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당시 피해가 기상 요인뿐 아니라 질소 과다 시비, 규산·칼리 부족, 토양 유기물 관리 미흡 등 재배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기상 조건에서도 재배 관리 수준에 따라 피해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농기원은 올해 벼 안정생산을 위해 농업인이 실천해야 할 사전 관리 사항으로 △영농 전 토양검정 △균형 잡힌 토양양분관리 △지역 적합 품종 선택을 제시했다.

특히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토양검정을 통해 논의 양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발급되는 시비처방서를 활용해 질소·인산·칼리 및 유기물 함량에 맞춘 비료 사용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질소 과다로 인한 병 발생 위험을 줄이고 벼 생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조생종 또는 중생종 품종을 선택해 재배기간을 다소 단축하면 출수 이후 고온기 노출 기간을 줄일 수 있어 병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구청장협의회는 22일 북구 한 식당에서 정례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회원 특별민주명예수당 신설' 안건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주구청장협의회, 특별민주명예수당 신설

1381명 대상…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광주 5개 자치구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선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민주명예수당을 신설한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22일 북구 한 식당에서 정례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회원 특별민주명예수당 신설'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하나로 특별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예우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특별민주명예수당은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회원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2월 임택 동구청장과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중앙회 사무총장의 면담을 통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자치구는 우선 올해는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통합 시군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별민주명예수당 대상자는 총 1381명으로,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 171명, 서구 349명, 남구 250명, 북구 418명, 광산구 193명 등이다.

임택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회원의 특별한 헌신에 대해 그에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1980년대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아픈 기억이 전 세계의 평화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월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가 열린다.

협의회 회장단 20명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100여명은 지방자치 관련 정부 정책 건의, 공동현안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한 뒤 국제회의실~빛의숲~대나무정원~박물관~야외광장, 전남도청 등을 투어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통합도시, 시·도민 정책 제안으로 설계

전남도, 31일 행정통합 주제 청책대동회 개최

광주·전남 통합도시의 밑그림을 시·도민 정책 제안으로 그리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남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바란다'를 주제로 전남 청책대동회 '바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책대동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궁금증을 해소하고, 통합 이후 어떤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시·도민의 정책 제안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광주·전남 320만 시·도민이 통합도시의 설계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내외빈 초청과 축사, 마이크 독점을 배제한 '3무 원칙'을 적용해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한다. 진행은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맡는다.

청책대동회는 지난해 두 차례 개최돼 시·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과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도 공개 신청을 통해 선정된 정책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경제부지사와 관계 부서장이 현장에서 질의응답에 나선다. 현장 참석자에게도 자유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전남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도정 전반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청책대동회에는 일반 참여자뿐 아니라 자치·환경·노동·농업·교육 등 5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전남해수원,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지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월 2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새우류·자라류·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를 받고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어가(법인)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로, 금리는 연 1%다. 상환기간은 품종별로 패류 2년, 어류·새우류·자라류·기타어류(내수면·해수면 포함) 3년이며,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가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박정렬 기자 holbul@

나주시 공고 제2026-15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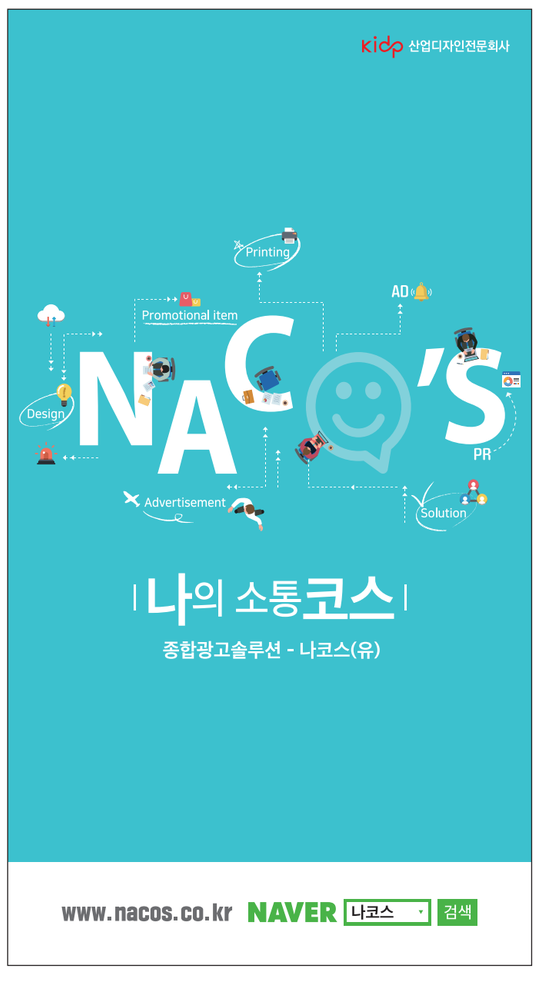
노안2 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재수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나주시 공고 제2025-1620호(2025.10.10.)로 공고한 노안2 농공단지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등의 반영으로 산업단지계획(안)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농지법」 제3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및 공익사업인정,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의견 청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나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안2 농공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231-1 일원
다. 사업면적 : (당초) 139,481㎡, (변경) 145,443㎡(증 5,962㎡)
라.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
마.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농업진흥지역해제 : 농업진흥지역 3,720㎡ → 농업진흥지역 밖 3,720㎡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	면	리			지적	편입		
1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449-10	과	15,500	3,720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2.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 2026년 1월 23일 ~ 2월 11일(20일간)
나. 공람장소 :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노안면 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농업진흥지역 해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안) 등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마.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바. 제출방법 : 공람장소 내 비치된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

3. 기타사항
가.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및 관계부서 협의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산단조성지원팀(☎061-339-8323),나주시청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1-339-78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